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③ 08. ④ 09. ① 10. ①  
11. ② 12. ⑤ 13. ② 14. ⑤ 15. ④ 16. ② 17. ② 18. ② 19. ③ 20. ④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값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을 정치의 기능으로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익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2. 법치주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치주의 유형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고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ㄷ.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이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 ㄴ.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3. 기본권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값이 침해받은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을이 침해받은 기본권은 언론·출판의 자유로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은 자유권이다. ⑤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 ②사회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했다.
- ③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④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법원, B는 헌법 재판소, C는 대통령, D는 국회, E는 국무총리이다. ④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대법원은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심판한다.
- ②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 ⑤ 국회와 국무총리는 모두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근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④ 국제 평화주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⑤ 문화 국가의 원리는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6.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④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국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 ②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모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키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7.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③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에 따라 주민은 적법한 요건을 갖춰 조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은 수직적 권력 분립에 해당한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로 직접 민주 정치 요소에 해당한다.
- ② 지방 자치 단체장은 시행령에 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이 아닌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 ④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 의회에서 한다.
- 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기대 효과로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한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의 신속성 확보’는 관련이 없다.

**8.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대법원, B는 헌법 재판소,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대법관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같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②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 ③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모두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⑤ 소송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9.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A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B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된 특징이고,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만의 특징이다. 따라서 (가)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은 1점 이상이 된다. B국에서는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①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으로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은 1점이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므로 (나)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 ③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 ④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 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소추권,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10. 상속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① A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C는 을과 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면서 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이다. D는 갑과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가 아닌 양자이다. 따라서 B, C의 사고 당시 갑, 을과 A, C, 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B는 갑과 병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B는 갑, 병과 친자 관계가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D는 갑과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가 아닌 양자이므로 무는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B, C의 사고 당시 C는 D와 달리 갑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 ④ C는 D와 달리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다.
- ⑤ C의 사망으로 정과 달리 을은 C의 상속인이 된다.

**11. 정치 과정 이해**

**정답 해설 :** ㄱ. 전자 청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민 동의 청원 제도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ㄷ. 국민 동의 청원 제도와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운영은 모두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인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정치 과정에서 사례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는 투입, 환류에 해당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시에 제안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 ㄹ. 국민 동의 청원 제도와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운영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가)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들어간다. ㄷ.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ㄴ.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적용되는 데, 이때 점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13.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② 판사는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다.
- ③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 측이 법원에 청구하며 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법원이 한다.
- ④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4.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⑤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와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자료에서 (라)는 무죄 판결이고, (마)는 유죄 판결이므로 D와 달리 E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서는 A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② (나)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른 B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③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④ C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 D의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 중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었다.

**1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교사가 제시한 사례에서 토끼를 잡은 사람의 행위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도덕적 규범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자국의 안보를 국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를 보장한다고 본다.

**16.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ㄱ. 갑의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ㄴ.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해고 처분이 근로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 사례에는 근로 3권 침해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ㄷ. 갑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므로 갑은 상소할 수 있다.

**17.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이해**

**정답 해설 :** ㄱ.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갑의 A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갑의 A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ㄴ.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와 갑이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이다. 계약 체결 당사자인 갑은 내부 수리를 못하여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 ㄷ. 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을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총회이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서로 다른 15개국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의 일반 원칙을 포함하여 조약, 국제 관습법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은 국가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④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아닌 비상임 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 ⑤ 안전 보장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표결 시 1국 1표주의가 적용된다.

**19.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갑이 병의 확대 청구에 응하여 계약을 추진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을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병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였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과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상황 1>에서 병은 갑에게 취소 여부의 확대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상황 4>에서 갑,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갑국에서는 현재 의회 의원 선거 시 지역구 의원 60명만 선출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 60명, 비례 대표 의원 30명을 선출하는 의회 의원 선거 제도로 변경하려고 한다.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선거 결과이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수(석)		22	30	4	4
정당 득표율(%)		34	43	16	7
1안	비례 대표 의석수(석)	10	13	5	2
	총 의석수(석)	32	43	9	6
2안	정당별 할당 의석수(석)	31	39	14	6
	지역구 의석수(석)	22	30	4	4
	비례 대표 의석수(석)	9	9	10	2
	총 의석수(석)	31	39	14	6

- ④ <2안> 적용 시 C당의 총 의석수는 14석이고, <1안> 적용 시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13석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1안> 적용 시 B당은 43석을 얻어 90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 ② <1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나, <2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할당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1안>이 <2안>보다 정당 득표율과 비례 대표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어 비례성이 높다.
- ③ <2안> 적용 시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과 B당이 모두 9석으로 동일하다.
- ⑤ D당의 총 의석수는 <1안>, <2안> 적용 시 모두 6석으로 동일하다.